

23-01(통권 941호) 2023.01.06

# 경제주평

-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  
- 혼돈의 세계 경제

# 목 차

---

## ■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 - 혼돈의 세계 경제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의 주요 내용 .....	2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저 자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

#### - 혼돈의 세계 경제

##### ■ 개요

2023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의 주요 내용

#### ① Deglobalization(위기의 세계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감소하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현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화되면서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탈세계화의 가속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국제적인 분업체제가 약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브렉시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화 균열 조짐이 나타난 이후 트럼프주의(Trumpism), 코로나19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무역의 장벽이 생기고,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전개될 탈세계화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실천을 통해 탈세계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은 공급망 및 수출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② Strong, Now Shaking(흔들리는 선진국)

그동안 세계 성장을 주도하였던 주요 선진국(G7)이 이전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며 그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며 2023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선진국의 지위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더욱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더라도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위상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적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선진국의 위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선진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새로운 질서 형성에 앞서 우리나라의 성장 기반 안정화에 힘쓰는 한편 세계 경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③ Amazing Asia(위기 속에 빛나는 아시아)

2023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인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 경제는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여타 지역 대비 양호한 성장 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IMF에 따르면 아시아의 2023년 성장률은 4.3%로 2022년(4.0%) 대비 개선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신흥개도국은 세계 및 여타 신흥국의 부진한 전망과 대조적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아시아 경제의 성장세는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세, 주요국 대비 양호한 인플레이션 및 통화긴축 정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률을 비교해봐도 양호한 성장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성장하는 아시아의 역동성을 국내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차원의 전략 추진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전략도 다변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경계와 대비는 물론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변화 리스크 대응 전략도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다.

### ④ Swamp in Debt Overhang(정부부채 과잉의 늪)

코로나19 위기 이후 각국의 정부부채 누증이 심화된 가운데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각국의 채무상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Fiscal Monitor에 의하면, 2023년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은 2022년 대비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코로나 19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각 정부의 정부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누증 규모는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유로존 경기 침체 폭이 심화되어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남유럽발 재정위기 재현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유럽 중심의 재정위기 발생에 따르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세계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⑤ Return to Oldies, but Goodies(원전의 귀환)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문제 인식 확대 등에 따라 원전의 필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다만,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 안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저탄소, 저비용의 장점

을 지닌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받으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전략 중 하나로 원자력 발전의 활용을 확대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세대 원전 등에 관련된 신규 투자처 및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단, 핵폐기물처럼 환경 및 인간안전보장 등에 관한 문제점도 상존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도 지속 추진해나가야 한다.

## ⑥ Cold and Hungry World(춥고 배고픈 세계)

기후위기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정치 및 사회 불안정이 확대되면서 식량·에너지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식량안보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수급 불안정과 코로나19 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023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석탄·석유 가격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되어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빈곤층의 생존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의 수급불안정 상황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럽의 겨울철 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對 유럽 가스 공급을 제한할 경우 에너지 위기가 심화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 및 에너지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단기적인 수급 대책은 물론 중장기 차원의 대응 전략 추진을 통해 상품 수급 불안정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수급은 물론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대응 역시 국제적인 공조 강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위협요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 ⑦ Overheated Earth(지구의 한계를 앞당길 인구문제)

지난 2022년 11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하면서 지구가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인구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구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UN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지속 증가하여 2086년 104억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에야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증가세와 함께 고령화와 지역별 인구 불균형은 심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된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노동 인구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높은 출산율로 지역별 인구 불균형이 심화하여 빈곤, 기아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국가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1.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23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대 트렌드를 선정함
  - 정치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Deglobalization(위기의 세계화)』가 선정됨
  - 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Strong, Now Shaking(흔들리는 선진국)』, 『Amazing Asia(위기 속에 빛나는 아시아)』, 『Swamp in Debt Overhang(정부부채 과잉의 늪)』 등 3개가 선정됨
  - 산업·경영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Return to Oldies, but Goodies?(원전의 귀환)』가 선정됨
  - 에너지·자원 부문에서는 『Cold and Hungry World(춥고 배고픈 세계)』가 트렌드로 선정되었고,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Overheated Earth(지구의 한계를 앞당길 인구문제)』를 선정함

### <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 >

분야	주제
정치	1. Deglobalization(위기의 세계화)
경제	2. Strong, Now Shaking(흔들리는 선진국)
	3. Amazing Asia(위기 속에 빛나는 아시아)
	4. Swamp in Debt Overhang(정부부채 과잉의 늪)
산업·경영	5. Return to Oldies, but Goodies(원전의 귀환)
에너지·자원	6. Cold and Hungry World(춥고 배고픈 세계)
사회·문화	7. Overheated Earth(지구의 한계를 앞당길 인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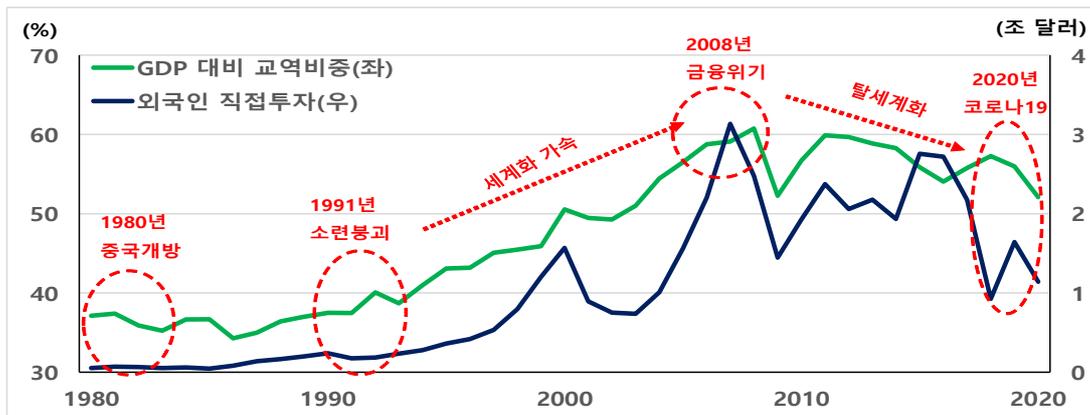
## 2.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의 주요 내용

### ① Deglobalization(위기의 세계화)

- (의미)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감소하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현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화되면서 정치·경제·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발생
  - 코로나19 위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탈세계화 현상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가능성 대두
    - 탈세계화란 세계화를 벗어나 국가 간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 코로나19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탈세계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지역화(regionalization) 등이 새로운 국제 질서가 될 것으로 예상
- (내용) 탈세계화의 가속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국제 분업체제가 약화되면서 세계 경제성장의 구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브렉시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화 균열 조짐이 나타난 이후 트럼프주의, 코로나19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세계화 현상 가속화
    - 1980년 중국의 개혁 및 개방과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는 시장개방, 자유무역, 국제분업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브렉시트(Brexit), 트럼프주의(Trumpism, 미국우선주의),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화 현상이 후퇴
    - 세계의 GDP 대비 교역(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합) 비중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7년 각각 59.1%, 3.1조 달러에서 2020년 각각 52.1%, 1.1조 달러로 급격히 감소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국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對서방국 가스공급 중단으로 탈세계화 현상 가속화
  -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한 축,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한 축이 되어 경쟁하는 신냉전(Cold War) 체제 가능성
    - 미국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동맹 간 공급망 구축)을 통해 우방국과의

-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지속할 가능성
- 특히, 러-우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전망
-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무역의 장벽이 생기고,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지역화 추세 확산**
  - 세계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원가절감이나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계화보다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지역화가 추세로 자리잡을 가능성
  - 산업생산 방식은 기존 오프쇼어링(offshoring)에서 온쇼어링(onsourcing, 자국내 생산),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가 물품 조달) 등으로 전환
- **탈세계화 현상의 가속화로 세계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탈세계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국제적인 분업체제가 약화되면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부과로 거래비용이 상승
  - 에너지·식량·희귀금속 등을 독점하는 국가가 시장지배력을 발휘하여 자원공급량을 조절하는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상존

< 전세계 GDP 대비 교역 비중 및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



자료 : World Bank.

- (시사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전개될 탈세계화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실천을 통해 탈세계화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은 공급망 및 수출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함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 ② Strong, Now Shaking(흔들리는 선진국)

- (의미)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주요 선진국(G7)이 이전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며 그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선진국의 경기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선진국의 영향력 또한 약화될 위기
    - 2021년 선진국은 5.1% 성장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
    - 하지만 2022년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장기화, 고강도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었음
    - 향후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선진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큼
- (내용)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선진국의 지위마저 흔들릴 위기에 있음
  - 2023년 경기 침체 : 선진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경기 침체마저 우려되는 상황
    - IMF<sup>1)</sup>에 따르면 2023년 선진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강도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0.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신흥국이 3.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대조적
    -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각 -0.3%, -0.2%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또한, 2022년 12월 기준 선진국의 평균 경기침체확률<sup>2)</sup>은 70%에 달할 정도로 경기 침체 가능성 점증
  - 장기 저성장 기조 :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더라도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는 이어질 전망
    -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물가상승 없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은 선진국의 경우 1.4%인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4.2%인 것으로 나타남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2) 선진국의 경기침체확률: 캐나다 65%, 프랑스 65%, 독일 90%, 이탈리아 87.5%, 일본 30%, 영국 90%, 미국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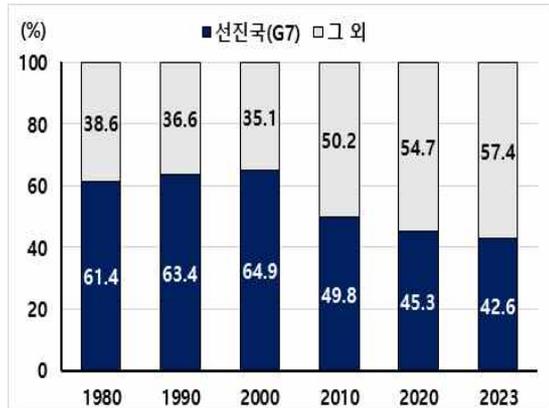
- 특히, 이탈리아 및 일본은 0%대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 동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이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더라도 저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선진국 위상 축소 :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선진국의 위상이 축소
-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7개국(G7)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4.9%에서 2023년 42.6%로 줄어들 전망
  -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였던 선진국의 영향력이 축소된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급부상하며 세계 경제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짐
  -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중 패권 경쟁, 자국 주의, 무력 충돌 등의 갈등 심화가 우려됨

< 선진국 및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

국가	잠재성장률(%)
선진국(G7)	1.4
캐나다	1.6
프랑스	1.1
독일	1.0
이탈리아	0.6
일본	0.6
영국	1.4
미국	1.8
신흥국	4.2

자료 : OECD.  
 주 : 잠재성장률은 2022~2026년 평균.

< 선진국의 세계 경제 비중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주 : 명목 GDP 기준.

- (시사점) 기존 선진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새로운 질서 형성에 앞서 우리나라의 성장 기반 안정화에 힘쓰는 한편 세계 경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신성장동력 육성, 기술 동맹 체제 구축 등의 경제 및 정치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노 시 연 선 임 연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 ③ Amazing Asia(위기 속에 빛나는 아시아)

- (의미) 세계 경제 전반에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아시아 경제는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타 지역대비 양호한 성장 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 요인의 여파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나 아시아는 신흥개도국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중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물가상승률, 미국, EU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음
    - IMF 등 주요 기관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아시아는 여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내용) 2023년에는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황이 예고되는 한편, 아시아는 신흥개도국 중심의 약진이 기대됨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 2023년 세계 경제는 둔화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아시아는 신흥개도국 중심의 성장세 지속 전망
    - IMF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는 2022년(3.2%) 대비 크게 둔화된 2.7%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아시아는 2022년(4.0%) 대비 개선된 성장세(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시아 신흥개도국은 세계 및 여타 신흥국의 부진한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성장세가 2022년(4.4%) 대비 2023년(4.9%) 확대될 전망
  - 성장 요인 : 아시아 경제의 성장세는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세, 주요국 대비 양호한 인플레이션 및 긴축 정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말레이시아(24.5%), 베트남(22.2%), 싱가포르(11.3%) 등 아시아 국가는 2022년(1~10월 평균) 중 높은 수준의 소매판매 증가율을 기록
    - 또한, 아시아는 2022년(1~10월 평균) 주요국 대비 완만한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인도 6.0%, 인도네시아 4.0% 등) 긴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 아시아 국가는 수출 부진에도 여타 국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비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향후 글로벌 교역 악화 등 여건에도 내수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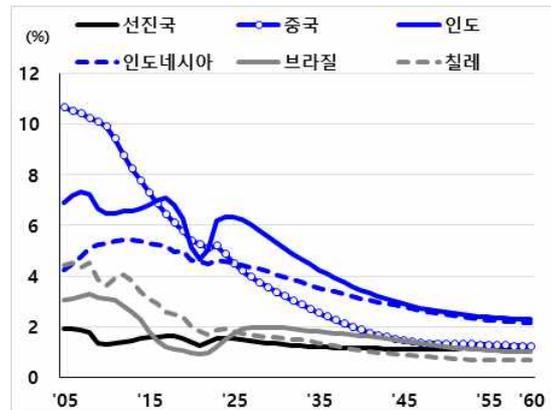
-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률을 비교해보아도 아시아 지역은 여타 지역 대비 높은 성장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전망
  -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인도 5.9%, 인도네시아 4.3%)는 선진국(1.4%), 브라질(1.9%) 등 남미 신흥국 대비 양호한 성장 기초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sup>3)</sup>
  - 또한, 인도와 중국이 각각 세계 인구 1, 2위의 시장인 점을 고려할 때,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아시아 신흥국<sup>3)</sup> 금융위기 가능성, 중국의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은 경계해야 할 필요
  - 미 연준(Fed)의 고강도 긴축 지속으로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해외자금 이탈 가속화와 불안정성 확대가 우려
  -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수출마저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

<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October 2022.

< 지역별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109, October 2021, Long-term Baseline Projections.

- (시사점) 향후 성장하는 아시아의 역동성을 국내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차원의 전략 추진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전략도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
- 단, 아시아 신흥국 금융위기 및 중국 경기 침체 심화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한 경계와 대비는 물론 불안정한 정치·사회 변화 대응 전략도 병행 추진되어야 함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3) 2025년~2030년 잠재성장률 평균 기준.

#### ④ Swamp in Debt Overhang(정부부채 과잉의 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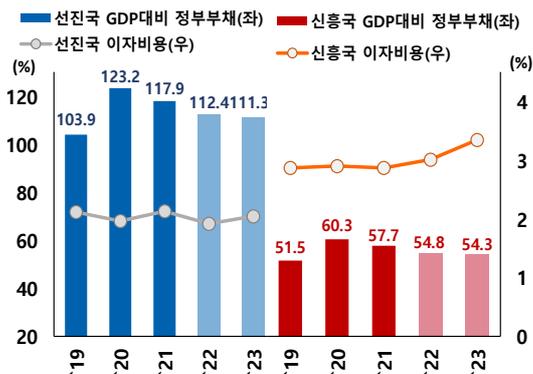
- (의미)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 가운데 세계 정부의 정부부채 규모가 심각하게 누증된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각국의 국채상환 부담이 가중<sup>4)</sup>
  - 코로나19 위기 이후 각국의 정부부채 누증이 심화된 가운데 고금리 압력으로 각국의 채무상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정부부채(public debt)의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국채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인 비용 발생
    - 또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신용도가 하락하면 국채의 정상적인 발행이 어려운 재정위기(Fiscal Crisis)로 이어질 수 있음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각국의 정부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
  
- (내용) 각국의 정부부채가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남유럽 국가는 2012년 재정위기 수준을 상회해 남유럽발 재정위기 재현에 대한 가능성 우려
  - 전세계 정부부채 규모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각국의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막대한 재정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
    - IMF에 의하면 2020년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123.2%로 전년 대비 20%p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신흥국(중국 포함)은 전년 대비 8.8%p 증가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반등으로 각국의 재정적자가 감소하였으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 향후 세계경기가 하강국면에 급속히 진입하는 상황에서 통화긴축 기조 유지로 각국의 국가채무 상황부담 심화
  
  - 2023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가부채 수준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19위기 이전을 상회하여 각국의 정부부채 상환 부담은 가중<sup>5)</sup>

4) 본고에서는 국제표준이 되는 IMF 기준인 일반정부부채(general government liability)를 사용해서 논의 전개. 일반 정부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5)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2.

- 선진국과 신흥국(중국 제외)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각 정부의 부채관리로 하락추세가 나타나겠으나 코로나19 위기 이전 대비 높은 수준 기록
  - 선진국과 신흥국의 2023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각각 111.3%, 54.3%로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하나, 여전히 코로나19 위기를 상회
  - 또한, 통화긴축 여파로 신흥국의 부채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한편, 남유럽의 정부부채 누증 규모는 2012년 재정위기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러-우 전쟁 여파로 유로존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국제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남유럽발 재정위기 재현 가능성 우려
-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의 2022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2년 재정위기 당시 수준을 대체로 상회
  - 향후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오름세로 ECB의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남유럽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
  - 또한,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한 유로존 경기침체 현실화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남유럽발 재정위기 재현에 대한 가능성 상존

< 선진국/신흥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이자비용 전망 >



자료 :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2.  
 주 : 신흥국의 경우 중국을 제외.

< PIGS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추이 >



자료 : IMF.  
 주 : 2022년 자료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22) 전망치.

- (시사점) 남유럽 중심의 재정위기 발생에 따르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세계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⑤ Return to Oldies, but Goodies(원전의 귀환)

- (의미)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문제 인식 확대 등에 따라 원전의 필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이 확대될 전망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주요국에서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 및 자립이 주요 이슈로 부상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EU(2019), 중국(2020), 한국(2020) 등 주요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 특히,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에너지 안보와 자립이 주요 이슈로 부상
- (내용) 글로벌 주요국에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원전의 신규 건설 및 수명 연장 등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확대될 전망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구성으로 원자력 발전의 활용을 확대하는 흐름이 강화
    -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원전 세금공제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하였으며, EU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여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
    -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및 중국에서도 원전 비중 확대 흐름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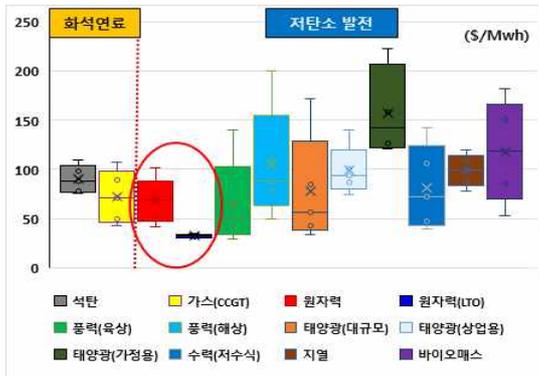
<주요국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국가	주요 정책
미국	- 원전 CFE(Carbon Pollution Free Electricity) 포함, \$60억 규모 상업 원전 지원책(조기폐쇄 방지 및 미래형 원전 개발, 인프라법 中), 차세대 원자로, SMR R&D 등 개발지원(\$13.6억), \$30억 규모 원전 사업자 세금공제(IRA 中) 등
유럽	- (EU) 기존 원전의 연장 투자는 2040년,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전제로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 - (영국) 2050년까지 신규 원전 8기 추가 건설(원전 비중 15% → 25% 확대), 신규 원전 건설(£17억) 투자 및 차세대 원자로 개발(£3.85억) 투자 계획 등
한국	- 2030 NDC 달성을 위한 원전(32.4%)과 재생에너지(21.6%)의 균형 있는 활용('36년까지 12기 계속 운전, '22~'25년 6기 신규 건설)
중국	- 202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 70GW 추진 및 총 1,200억 위안 규모의 원전 6기 신규 건설 승인,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진행(18기)
일본	- 2030년까지 원전 비중 20~22% 목표 제시, SMR 등 차세대 원전 신설, 원전 재가동 확대, 운전 기간 연장 등 추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등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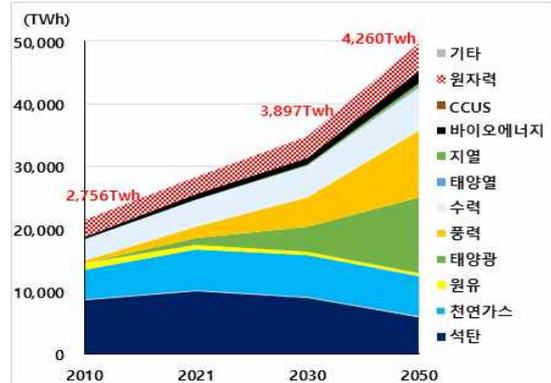
- 특히, 원자력 발전의 경우 저탄소·저비용의 장점을 지닌 에너지원으로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발전량이 확대될 전망
  - 저탄소 기술 중 원자력은 균등화 발전비용(중간값)<sup>6)</sup>이 \$69/Mwh 수준으로 여타 재생에너지 대비 저렴한 특징
  - IEA에 따르면 향후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은 감소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량은 2021년 2,776Twh에서 2050년 4,260Twh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sup>7)</sup>
- 한편, 방사성 폐기물 및 저장시설 등 고유 문제점은 여전히 논란 중인 상황으로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지 않는 국가들도 상존
  - 현재 독일은 총 30기의 원자로를 영구 정지하고 3기의 원자로만 가동 중인 상황이나, 2023년 4월까지 원전 제로를 완료할 방침
  - 대만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수명 연장 없이 노후 원전 3기를 모두 폐쇄하여 현재 3기를 가동 중이며, 탈원전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인 상황

<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



자료 : IEA,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 발전원별 발전량 전망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2.  
주 : Stated Policies Scenario(STEPS) 기준.

- (시사점)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세대 원전 등에 관련된 신규 투자처 및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 단, 핵폐기물처럼 환경 및 인간안전보장 등에 관한 문제점도 상존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도 지속 추진해나가야 함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6) 균등화발전비용(Levelised cost of electricity)은 투자비, 유지비, 연료비, 탄소배출비용, 해체비용 등 전력 생산 설비의 전 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변환한 값을 의미.  
7) 현 정책 시나리오(STEPS)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은 2050년 4,260Twh로 확대되며, 목표 공약 시나리오(APS)는 2050년 5,103Twh, 넷제로 시나리오(NZE)는 2050년 5,810Twh로 확대 전망.

## ⑥ Cold and Hungry World(춥고 배고픈 세계)

- (의미) 기후위기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정치 및 사회 불안정이 확대되면서 식량·에너지 위기가 세계의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
  - 잦은 이상기후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 및 에너지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글로벌 식량·에너지 위기 심화
    - 식량 및 에너지 위기는 기후위기(가뭄, 폭염, 폭우, 한파)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공급 불안정뿐 아니라 정치 및 사회 불안정에 의해서도 발생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정치·사회 불안정이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한 인구가 급격한 증가
    - 또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축소하고 유럽 또한 러시아산 석유 및 석탄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에너지 시장에 전례 없는 충격 발생
- (내용)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철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시 에너지 및 식량 위기 상존할 가능성
  -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수급 불안정과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전세계적 인 식량위기가 심각한 상황<sup>8)</sup>
    - FSIN(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에 의하면, 2021년 IPC 3단계 식량 위기 이상에 처한 인구는 총 1억 9,300만 명(53개국)으로 전년 대비 4천만명 가까이 급증<sup>9)</sup>
    - 이중 극한 기후(extreme weather, 평상시 기후수준을 크게 벗어난 기상현상) 충격으로 아프리카 8개국 중 약 2,350만 명이 식량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공급망이 교란으로 식량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위기를 겪는 인구는 총 3,030만 명(21개국)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전례 없이 폭등하면서 극심한 에너지 위기 발생<sup>10)</sup>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석탄·석유 가격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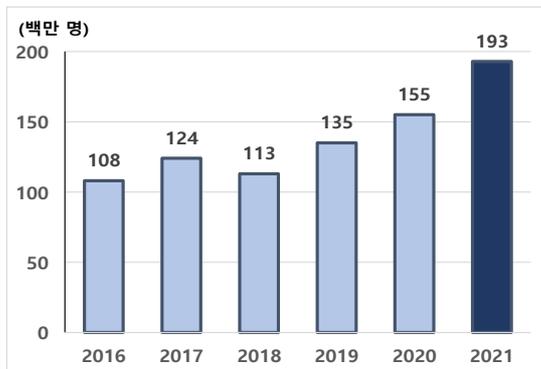
8) 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2022.5.

9) I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는 식량위기를 5등급으로 분류. 3등급은 영양 결핍 등 어려움을 겪는 '위험'단계, 4등급은 영양실조를 겪는 '심각'단계로 시급한 지원조치가 필요. 5등급은 기근, 아사 등 재난 상태의 '매우 심각'단계로 긴급지원조치 필요.

10) IEA, World Energy Outlook, 20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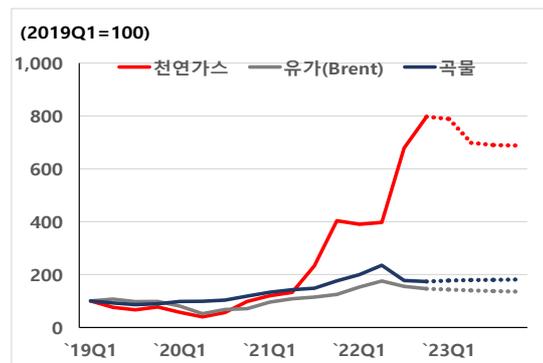
- 특히, 전체 소비에서 식량 및 에너지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은 빈곤층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의하면 2022년 유례없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전세계 7,500만명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며, 약 1억 명의 인구가 취사 연료가 부족해 장작에 의존
-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기후위기와 겨울철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가능성으로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가능성 상존
  - 기후위기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 기후로 인한 식량의 수급불안정은 지속될 전망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로 2050년까지 육지 면적의 90%가 사막화되어 주요 곡물 가격이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sup>11)</sup>
  - 또한, 유럽의 겨울철 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對유럽 가스 공급을 제한하는 경우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 상존

< IPC 3단계 식량 위기 이상에 처한 세계 인구 추이 >



자료 : 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2022.5.  
 주 : IPC 3단계 식량위기는 식량부족으로 영양결핍 등 어려움을 겪는 '위협' 단계.

< 에너지 및 곡물 가격 추이 및 전망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주 : 2019년 1분기 기준 100으로 지수화.

- (시사점) 우리나라 역시 식량 및 에너지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단기적인 수급 대책은 물론 중장기 차원의 대응 전략 추진을 통해 상품 수급 불안정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특히, 식량과 에너지 수급은 물론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대응 역시 국제적인 공조 강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야 함
-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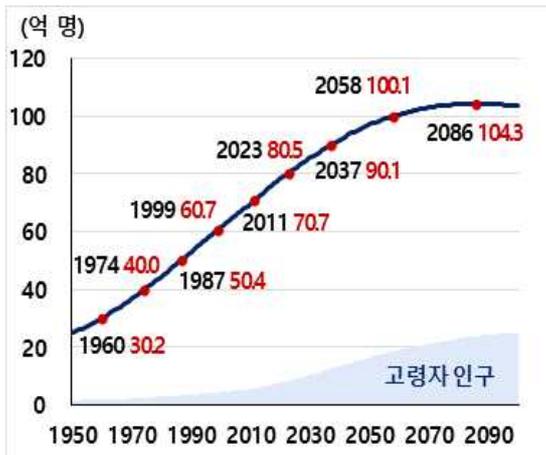
1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nd Land, 2019.8.

## ⑦ Overheated Earth(지구의 한계를 앞당길 인구문제)

- (의미) 2022년 11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구가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2022년 11월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선 지 11년 만에 80억 명을 돌파하면서 인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증가
    - 8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생존할만한 환경을 지구가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
    - 식량, 에너지 등 인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인류 생존 및 번영을 보장받기 어려움
- (내용) 인구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구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인구 증가세 지속 : UN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86년 104억 명으로 정점을 맞을 전망
    - 세계 인구는 1987년 50억 명, 1999년 60억 명, 2011년 70억 명, 2022년 80억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증가
    - 향후에도 인구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어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이르는 것은 15년 후인 2037년, 100억 명에 이르는 것은 36년 후인 2058년으로 예상
    - 세계 인구는 2086년 104억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전망
  - 특징 ① 고령화 심화 : 의학 발전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인구 증가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령화를 심화시킴
    - 2023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8억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 인구의 10% 수준
    - 현재 세계는 이미 고령화 사회(고령 인구 비율 7% 이상)에 진입한 상황이며, 2038년에는 고령 사회(고령 인구 비율 14%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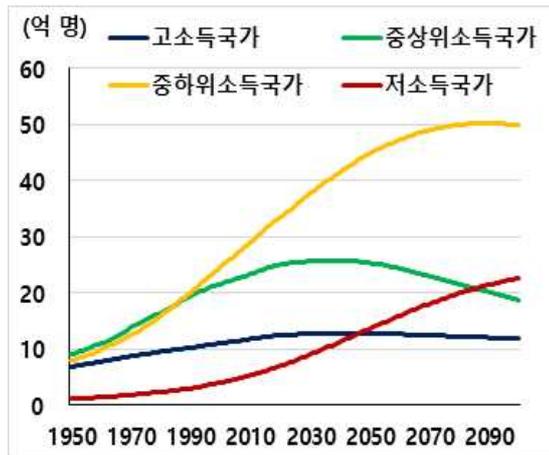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노동 인구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특징 ② 지역별 인구 불균형 :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높은 출산율로 지역별 인구 불균형 심화
  - 인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며 인구가 증가
  - 특히, 인도는 인구 1위 국가인 중국을 올해 안에 추월할 정도로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저소득국가와 중하위소득국가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빈곤, 기아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더 나은 환경으로의 대규모 이주와 이로 인한 국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세계 인구 추이 >



자료 : UN.

< 소득수준별 인구 추이 >



자료 : UN.

-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국가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노 시 연 선 임 연구 원 (2072-6248, syroh@hri.co.kr)